

[기고] 박진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한국수산업경제 | 승인 2026.01.14 14:15

청년어업인 유입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박진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지금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활력 저하 수준을 넘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어황 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어업비용 증가, 인력난 등으로 어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어가인구 고령화와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촌향도 현상으로 어촌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직감하고 있으며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이라는 수산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수산 혁신, 수산물 유통 혁신, 어촌 활력, 연안 경제 활성화, 해상풍력 추진이라는 5가지 핵심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하며, 세부 과제로 청년 어선·양식장 임대 확대, 청년어업인 육성(주거·일자리·금융 등) 등 청년어업인 지원정책도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청년어업인 정책에 비해 지원 분야와 대상,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존재하는 진입장벽과 선결과제로 말미암아 청년어업인의 효과적인 유입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의 청년어업인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진입장벽과 이의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어촌의 청년 유입을 막는 장벽은 열악한 교육, 문화, 의료, 교통 등 농어촌지역이 가진 공통의 문제도 있지만 농업과는 차별화된 수산업만의 특성이 존재한다.

첫째, 초기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 부담이 크고 어촌지역 주거지 마련도 쉽지 않다.

수산업은 농업처럼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는 시작조차 어렵다. 예컨대 어선 구입이나 양식시설 마련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촌 정착을 위한 주거지 마련이 어려워 안정적인 정주 생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수산업 분야의 폐쇄성과 정보 부족은 청년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어업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매우 높다. 예컨대 양식업 면허나 어업 허가 등의 연장 시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신규 진입 또는 창업하려는 청년들의 면허·허가 취득 기회가 희박한 실정이다.

이러한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청년어업인 유입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청년들의 초기 수산업 기반 구축 비용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금 지원의 경우 어선과 양식시설 투자 등 대규모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자금 대출을 늘리고 융자 기간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어촌 빈집 수리 후 장기 임대주택 제공뿐 아니라 주거비와 노후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청년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수산 부문 면허·허가 등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어업 실무, 창업 교육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 어업인 중심의 면허·허가 제도를 신규 청년어업인도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예컨대 고령 한계어업인의 폐업 지원을 통해 허가·면허권을 확보하고 청년 전용 면허구역 조성, 외해 양식장 등 신규 양식 적지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어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일자리 다각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산업의 고도화, 즉 스마트 양식, 첨단 가공 기술 도입 등 청년들이 흥미를 느끼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첨단 미래 지향적 어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특산물,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어촌자원을 활용한 어촌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등 청년 창업을 위한 첨단 복합 산업화와 일자리 연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새 정부는 '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청년어업인 유입 확대가 유력한 대안이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는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어업인 단체, 청년어업인 등 현장 관계자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호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수산경제